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02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청렴지도' 만들어 부패 지자체 공개...청탁금지법 위반 공표
- 불가리아, EU 의장국 취임 하루 만에...부패방지법 '퇴짜'
- 부패신고자 더 철저히 보호...부패방지권익위법 국무회의 통과
- 한국판 '미투' 운동 확산... 검사 성추행 철저히 조사·처벌 촉구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해양환경관리공단] 청렴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3. 청렴 위반 사례

- 기관의 홍보 TV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우
-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4. 지식마당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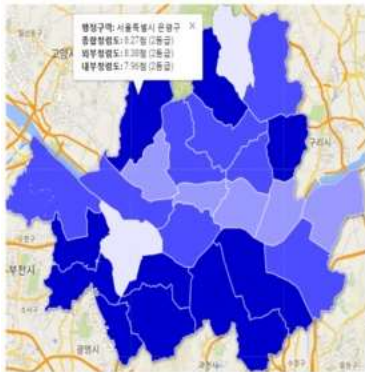
최근 동향 및 소식

1. '청렴지도' 만들어 부패 지자체 공개... 청탁금지법 위반 공표

정부는 대내외 국가청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채용비리'와 같은 부패빈발 분야를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8년 업무계획 내용을 이날 보도자료로 자세히 소개했다.

권익위는 올해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인한 정부신뢰 회복 △실질적 국민권익보호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주요정책으로 선정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행하는 권익위는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청렴도를 색깔별로 구분한 지도를 만들어 해당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별>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세계 52위까지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이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http://news1.kr/articles/?3217824>

2. 불가리아, EU 의장국 취임 하루 만에...부패방지법 '퇴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이 지난 2일 부패방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불가리아가 지난 1일자로 6개월 임기의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라데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 부패방지법이 부패를 막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며 “의회가 반부패위원회의 이사 선출 과정을 통해 형사 문제에 정치적으로 간섭 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부패방지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복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패방지법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부패와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다. 불가리아 민주주의연구소의 오토난 센토브 소장은 가디언에 “불가리아에서는 아무도 부패한 정치인을 기소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총체적인 국가 부패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으며, 불가리아 정부는 부패나 조직적인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7년 EU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3_0000193089&cID=10101&pID=10100

최근 동향 및 소식

3. 부패신고자 더 철저히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통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시행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등 보호범위가 확대 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부패신고로 임금손실, 소송비용 등 신고자가 입은 각종 불이익을 보상한다.

권익위 외의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 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 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http://news1.kr/articles/73195893>

4. 한국판 '미투' 운동 확산... 검사 성추행 철저히 조사·처벌 촉구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이후 한국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망과 JTBC ‘뉴스룸’을 통해 8년전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 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또 다른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 여성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사 시절 고위간부의 호출을 받고 관사로 갔더니 간부 혼자 그곳에 있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겪다가 문제제기를 못한 채 검사직을 그만두게 됐다고 털어놨다.

검찰 출신 다른 여성변호사도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비교하며 ‘난 너를 먹고 싶다’고 말한 선배 검사의 사례를 공개하는 등 서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판 ‘미투 운동’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131010009775>

윤리경영 실천 사례

[해양환경관리공단] 청렴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공단은 2012년 UN Global Compact 가입, 2016년 CSV 포터상 수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산업부장관상 수상 등 윤리경영 및 CSR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윤리경영 추진체계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감사실을 통하여 반부패 윤리경영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윤리경영을 경영전략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2015년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래전략팀과 감사실이 협업하는 '청렴윤리 TF'를 신설하여 반부패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윤리경영의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획예산팀으로 소속을 이관하여 윤리경영 부서에서 예산 및 대정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어 윤리경영 활동의 추진력을 강화하였으며, CEO가 직접 주관하는 윤리경영 추진 및 심의 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윤리경영 의지를 천명하였다.

2. 윤리규범 제정 및 운영

공단은 윤리헌장, 윤리행동 10대 준칙, 반부패 자정결의문, 직무청렴계약서, 임직원청렴행동수칙, 윤리강령규정, 임직원 행동강령과 같은 윤리규범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범들은 윤리문제의 성격 및 대상자에 따라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원칙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공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의 근간을 맡고 있다. 2016년에는 54% 윤리규범의 개정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3. 윤리경영 소통 채널 및 모니터링

공단은 다양한 윤리규범을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공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부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트라넷을 통한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 퀴즈 CEO의 청렴 메시지 청렴의날 행사 6개의 신고채널 운영
외부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대상 간담회 외부고객 대상 CEO 청렴서한 발송 윤리경영 가이드북 발간 및 보급 청렴콘서트 Dr.행복멘토(청렴사례) 3개의 신고채널 운영

<윤리규범 공유 채널>

윤리경영 모니터링 제도로는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청렴 옴부즈만'이 존재한다. 10억이상 공사 등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 발주부터의 모든 과정을 감시 및 평가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 및 점검, 반부패 청렴활동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윤리경영 모니터링 제도는 지속가능경영 평가모형의 관점에서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 협력 및 고객 안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윤리경영 성과와 보상 연계

윤리경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에 연계하는 것은 윤리경영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윤리경영 실천 사례

도구 일 것이다. 이에 공단은 윤리경영 성과를 ‘청렴 윤리지수’라는 부서평가와 연계하여 보상하고 있다. 청렴윤리지수는 부서 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대상자 감점 시 감점을 시행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50%), 부서 평균 3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20%), 청렴 마일리지(10%), 윤리경영 수준 진단 참여(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영평가 모형의 관점에서 윤리경영 제도의 실행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4.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그램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부패방지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공단의 윤리경영 실행의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이다.

I. 실시간 부패감시 (자체 감사기능 강화)	II. 선제적 리스크관리 (사전 예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모니터링 내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III. 정보 상시공유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V. 클린 내부시스템 운영 (감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체크리스트 공유 ▪ 감사인과 멘터링 ▪ 징계처분 사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청렴직무교육 이수 ▪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그램 개요>

사전예방 중심의 윤리경영 체계의 운영은 공단의 윤리경영 강화에 있어 예산절감효과(2016년 기준 135만원 절감) 및 내부감사 수용도 제고와 같은 윤리경영 성과를 달성하였다.

5.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는 기업의 전략방향 및 핵심 사업과 연결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특징, 즉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에서의 사회공헌 접근이 두드러진다. 환경(바다)과 어민, 학생, 국민의 4대 범주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전략 및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해양 환경 대상(‘건강海 복지’)과 어민 대상(안심海 어민)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두드러진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선정 대상 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6.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윤리경영의 성과는 재무정보 등의 정량적인 자료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지표를 통한 평가가 적절하다. 공단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속가능경영평가, 교육기부대상, 직업능력개발 우수 훈련기관,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수상, CSV 포터상 수상 등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 뿐만이 아닌 기업 자체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Best Practice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의 윤리경영 사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공단의 설립목적 및 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으로 볼 수 있다.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의 대부분은 공단의 주업인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공단의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이해관계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실질적인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공헌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은 정책당국에서 구상하는 사회공헌의 To-Be 이미지에 더욱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

이은영, 조봉순, 공기업과 윤리경영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례, 2017

청렴 위반 사례

1 기관의 홍보 TV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기관의 홍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제공받았음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함
-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공직유관단체 회계담당자 A는 직원들의 휴일근무기록과 무인경비 시스템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3명과 공모하여 휴일근무기록을 조작하여 2년 4개월 간 총 1,7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시사점 :

- ① A외 3인은 실제 초과근무자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제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함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지식마당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

1. 의의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경영으로, 해당 조사는 유럽연합 및 국제 표준화 기구 등 각국 및 기관, 단체 등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의미를 포괄한다.

2. 개요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는 산업발전법 18조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조사이며, 산업계의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조사하여 실천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도입현황 및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산업계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경영 실천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해당 조사는 국내 유일한 지속가능경영 시계열조사로 기업 현황 파악 및 산업구조 변화 분석에 기초한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기업에게는 피드백 보고서를 통해 각 기업의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선정에 반영되었고, 일부 기업은 핵심성과지표(KPI)로 활용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가치창출(CSV) 모델’의 확산을 통해 기업들의 전략적인 사회공헌 방안 제시를 과제로 삼고 있다.

3.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8대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따라 1차 핵심평가와 2차 심화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 기업분류 및 조직형태에 따라 일부 영역의 문항이 다르게 적용되어 응답하는 문항의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차 핵심평가

1차 핵심평가는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 및 별도로 참여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지속가능경영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1차 핵심평가
평가내용	지속가능경영 기본체계
평가대상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 및 별도 신청 기업
평가목적	기업의 기본적인 지속가능경영 실태 파악
평가문항	35문항



구분	2차 심화평가
평가내용	지속가능경영 구체성과
평가대상	1차 핵심평가 대상 기업 중 별도 신청 기업
평가목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 진단
평가문항	(‘16년 기준) 88문항

지식마당

2차 심화평가

1차 핵심평가 대상 기업 중 해당 평가를 별도로 참여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심화평가를 진행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KoBEX SM의 평가는 8대 지속가능경영 이슈로 지속가능경영 비전, 지배구조, 작업장, 윤리경영,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환경경영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지

난 Newsletter에서 다루었던 “Global 지속가능경영”의 측정 항목을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KPI로 활용하는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Creating Shared Value Platform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 KoBEX SM과 Global 지속가능경영의 측정 항목 비교표 >

KoBEX SM		Global 100	
구분	항목	구분	항목
지속가능경영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지속가능경영 의지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자원 관리 KP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생산성 탄소 생산성 물 생산성 폐기물 생산성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독립성 주주제도 투명한 회계공시 감사제도 내부통제제도 리스크관리 		재무 관리 KPIs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정책 인력개발 및 훈련 안전 및 보건 복지 및 가족친화경영 노사관계 	직원 관리 KPIs	
윤리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추진현황 		추가 사항 KPIs
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동반성장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니즈 충족 및 분쟁해결 공정거래 및 정보보호 안전·안심 소비생활 지원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지역사회 활동 		
환경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 		

Quiz

- 다음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주요 정책이 아닌 것은?
 - ① 종합적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
 - ②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인한 정부신뢰 회복
 - ③ 실질적 국민권익보호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④ 부패 발생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 다음 중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의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속가능경영 비전
 - ②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인력감축 비율
 - ③ 윤리경영
 - ④ 환경경영
-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 ① 부정부패 적발 시 처벌 강화
 - ② 선제적 리스크 관리
 - ③ 정보 상시공유 연계
 - ④ 실시간 부패감시
- 다음 중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주요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도입현황 및 수준의 종합적 파악
 - ②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개선 전략 마련
 - ③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처벌
 - ④ 산업계에 지속가능경영 인식 강화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순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2. 답 ① 임직원 초과 근무시간 확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과 무관하다.
3. 답 ④ 직원지분률은 글로벌 100대 기업선정의 직원 관리와 관련된 KPI와 무관하다.
4. 답 ④ 강제준수 프로그램을 통한 적발실적은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의 분류와 무관하다.

관련 행사

1. KOICA, 해외사무소장 회의 열어 윤리경영 실천 결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사무소장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KOICA 연수센터 국제회의실에 모여 “윤리경영, 인권중심, 고객감동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미경 이사장은 “임직원을 비롯한 우리가 스스로 엄격해져야 청렴, 반부패 의식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085200371.HTML?input=1195m>

2.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식 출범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지난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으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선임됐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정관에서 ‘이 학회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감시체제의 구축 및 그 처벌 법제(이하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부패방지법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부패방지 및 청렴 긴으 강화 및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개선 방향 △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각종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분기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33>

3. 한국가스기술공사,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4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2018년을 맞아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각오와, 적극적인 반부패 및 청렴 의지를 다지고자 반부패·청렴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결의문에 서서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15118883151882004>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